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 “농업기술원 조직문화 개선”

농산경제위 업무보고... “부서장 리더십 강화·조직원 사기 진작 힘써야”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3일 제360회 임시회 기간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9년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업기술원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농업농촌 발전인 만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조직 및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농산경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방향을 바탕으로 부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원의 사기와 신뢰감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농업기술원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 부서장 리더십, 조직 유효성에 대한 항목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지적하며 “전북 농업의 선봉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직원들 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결원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적절한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병근 의원(전주2)은 “지난 2016년 농업기술원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온라인 소포털 삼라물

을 구축하고 매년 6,000만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투자했음에도 2년 만에 사이트 폐쇄하고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입점업체 선별 등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다”고 지적하며 “도내 우수한 농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2019년 도정의 첫 번째 목표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시군별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을 발굴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인 육성 교육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품목별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장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황영식 의원(김제1)은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원의 조직 명칭 변경을 했으나 그 기능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전북 농업의 미래 비전을 포괄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 품질 고급화 사업을 통해 도내 쌀 재배 농가와 대규모 식품기업이 계약재배를 하는데

연결고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도내에 자리 잡은 농업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예방·방제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병해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심 의원(정읍2)은 “농가에 고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화훼 신품종을 전문가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반인들이 신품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도내 공충사육농가들이 판로 확보가 어려워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공충사육 기술개발과 더불어 실용화 및 판로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공충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군의 유용공충성 공사례를 적극 보급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오월영령에게 사죄하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회 윤리위원회는 세 치 혀로 광주시민 모욕하고 역사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및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밝혔다.

## “5·18 폄훼 발언 국회의원 3명 제명하라”

민주 전주병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소속 시·도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최찬욱·국주영은·이명연·김명지 의원은 13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어제 김진태 의원의 전북 방문은 심한 유감을 뛰어넘어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면서 “이들의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병지역위원회 소속 16명 의원 명의의 성명에서 “전북 전주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북대학교 제1학 생활관에서 계엄군을 상대로 농성하다 희생된 첫 희생자의 민주화 정신이 계승된 곳으로 촛불혁명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강조한 후, “김진태 의원이 전북을 찾아 5·18관련 의혹이나 북한군 개입 여부를 언급한 사실

은 분노를 가중시키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이들 세 의원의 제명과 함께 김진태 의원의 방문에 대해 한국당 전북도지부의 책임있는 사죄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전남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전 선포식

사회 빈부격차·환경파괴 등 사회문제 대안 마련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비전선포식 및 전국위원회 전북간담회를 개최했다.

13일 열린 이번 행사는 ‘협력과 연대·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위원회의 활동과 양극화가 심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사회 문제의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의 특강에서 이현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개발협력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윤 중심의 시장 경제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진행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하

는 단체들과 중간 지원조직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의 사회적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회적 경제 가치인 포용과 연대 및 상생을 통한 지역 사회의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연대 정당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적경제기업, 시민경제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연대, 협력으로 전북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박순자 의원 아들 ‘24시간 국회출입증’ 논란에 반박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소속으로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박 의원실 임법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정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 같다”라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문건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3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민안전실 소관 도정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목을 끌었으며, 업무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전년대비 내진 지진대응체계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 34억 감소한 것”을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진대비 선제적 대응에 대한 구축 관련, 지진발생시 행동강령 및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소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도(전주3)의원은 “현장중심 재난대비 역량강화 관련, 생활안전교육과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이 시군순회 각각 연15회로, 시군 각 1회만으로는 충분한 재난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한빛원전 관련, 도민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사무라는 이유로 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는점을 지적하며, “지역자원시설에 증액 등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 도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최찬욱 도의원 “군산 불법

### 지정폐기물 조속 해결책 마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10선거구)은 13일 환경복지국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지정폐기물을 군산에서 신속히 방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군산 공공처리장 임시보관 불법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의 조치사항과 대응계획은 무엇이나” 따져 묻고 “불법 폐기물이 우리 도내에서 처리되는 것은 절대 불가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이뤄 신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